

| 국제동향 |

유럽 주요국의 노동 동향 (2019년 2/4분기)

손옥이 국제협력 전문위원

독일

독일의 경제 및 노동시장 현황, 기간제 고용, 독일 동부지역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단체교섭, 근로시간 기록에 관한 유럽사법재판소 판결 등이 본 보고서의 주요 내용이다.

독일 경기 회복의 조짐

독일의 GDP는 2018년 12월 소폭 감소한 후 2019년 초 안정화되었다. GDP는 2019년 1사 분기에 꾸준히 성장했고, 전 분기 대비 성장률은 0.4%를 기록했다. 이러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2019년 성장 전망치를 하향조정했다. 지난 1월 독일 정부는 2019년 경제 성장률을 1.0%로 전망했으나, 4월 이를 0.5%로 하향조정했다.¹⁾

미-중 및 미-유럽 무역분쟁이 계속되면서 독일의 수출 및 경제성장률에 타격을 주고 있다. 4월 수출은 2019년 3월 대비 3.7%, 2018년 4월 대비 0.5% 감소했다.²⁾

1) Spiegel Online (2019), Bundesregierung halbiert Wachstumsprognose, 11 April.

2) Federal Office of Statistics (2019), Deutsche Exporte im April 2019: -0.5 % zum April 2018, 7 June.

독일의 노동 시장은 현 경제 상황의 여파를 거의 보여주지 않고 있다. 2019년 5월 실업자 수는 4월 대비 7천 명 증가했으나(총 223만6천 명), 실업률은 연초 5.3%에서 5월 4.9%로 하락했다. 5월 취업자 수는 4,514만 명으로 늘어나 연초 대비 40만 명 이상 증가했다 (1월 취업자 수: 4천 4백 7십 2만 명).

- 연방통계청(Federal Office of Statistics): Konjunkturindikatoren – Bruttoinlandsprodukt
- 연방노동청(Federal Labour Office): Arbeitslose und Arbeitslosenquoten – Deutschland, West/Ost, Länder und Regionaldirektionen (Zeitreihe Monatszahlen ab 1991)
- 연방통계청(Federal Office of Statistics): Konjunkturindikatoren – Arbeitsmarkt

기간제 근로자 수 최고치 기록

고용연구소(IAB)의 2018 기관 패널 연구에 따르면 2018년 기간제 근로자 수는 3백 2십 만 명으로 최대를 기록했으며, 취업 건수의 44.1%는 기간제 계약에 해당했다. 사용자가 기간제 계약을 체결하는 주요 이유는 근로자의 직업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서(36.7%)였으며, 그 외 병가 등 대체 인력 확보(18.1%), 수요 증가로 인한 추가 인력 채용(11.9%) 등도 포함되었다.

해당 조사에 따르면 그러한 사유는 경제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및 금융 위기가 시작된 2009년에는 경제적 불확실성(22%)도 주요 원인 중 하나였으며, 근로자의 직업 적합성 평가는 2018년 대비 비중이 크게 낮았다(23.8%).

경제 상황 대비 기간제 고용 현황을 살펴보면 모순적인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기간제 근로자는 불경기에는 해고하기 쉬운 반면, 호황기에는 인력 충원에 도움이 된다. 따라서, 기간제 계약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사용자가 신규 인력 채용에 신중하게 된다.

독일 노동 시장은 견고하기 때문에 기간제 고용의 긍정적 효과(노동 시장 접근 등)가 우세하다. 또한, 통계에 따르면 사용자는 기간제 계약 종료 후 44.2%를 다시 채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사 사유와 관련해서는 기간제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는 11.1%에 불과했고, 43.4%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계약 해지에 해당했다.

독일 정부는 사용자들이 정규직 일자리를 제안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근거없는 기간제 고용(180만 근로자에 해당)을 제한할 계획이다. Hubertus Heil 연방노동사회부 장관이 추후 관련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 IAB-Forum: Immer mehr befristet Beschäftigte werden übernommen

사회적 파트너, 근로조건 규정 개정 움직임

2019년 2사분기에는 대대적인 단체교섭 갈등이나 합의가 이루어진 바는 없으나, 동부 지역의 금속전기산업 사용자 단체들과 독일금속노조(IG Metall)는 근로조건규정 개정 협상에 착수했다. 이번 단체협약은 동부 지역의 고용 및 투자 확보를 위해 근로조건규정을 개정하고 교섭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다.³⁾

여섯 차례에 걸친 협상 후에도 사용자 단체와 IG Metall은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주로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은 근로시간 규정 개정이다. 사용자 단체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의사 결정권을 직장평의회에 이관할 것을 제안했으나, 노조는 이를 거절했으며 노조와 직장평의회 간의 현행 업무분장이 변경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⁴⁾ 협상은 3/4분기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사법재판소 판결에 대한 강한 비난 이어져

2019년 5월 14일 유럽사법재판소 (ECJ)는 사용자가 시스템을 통해 근로자의 근무 시간을 기록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ECJ에 따르면, 근무시간 기록은 근로자의 최대허용근무시간 초과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EU 법에 따른 노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에 따라 모든 EU 회원국은 사용자가 근무시간 기록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해야 한다. 세부 사항 및 도입 방법은 각 회원국이 정할 수 있다.

3) Gesamtmetall (2019), Vorschlag zur Angleichung der Arbeitsbedingungen in den neuen Bundesländern vorgelegt, 10 April.

4) IG Metall (2019), Arbeitgeber blockieren Angleichung!, 27 June.

해당 판결은 독일 내, 특히 사용자 단체로부터 상당한 비판을 받았다. 독일 금속전기산업 사용자단체 연합(Gesamtmetall)은 기존의 근무시간 모델 (상호 신뢰 기반 등)이 무효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Oliver Zander 국장은 행정적 부담을 야기하는 구식 시스템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유연한 근무 체제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⁵⁾

다른 사용자 단체들도 Zander 국장과 목소리를 같이 하면서, ECJ 판결은 퇴보적 결정이며 ‘근무시간 기록 1.0’은 정부의 ‘노동 4.0’ 정책과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해당 판결 후 얼마 되지 않아,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는 ECJ의 판결을 당장은 실행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대신 해당 판결을 검토하여 실제로 독일에서 변화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Peter Altmaier 연방경제에너지부 장관은 출근부 재도입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 신뢰의 문화를 저해하며, 그동안 성공적으로 운영된 독일의 신뢰 기반 근로시간 제도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⁶⁾

독일 노동조합총연맹(DGB)은 ECJ의 판결을 전적으로 지지했으며, 근로시간 기록의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휴식 및 일 최대근무시간 확인이 가능해지므로 정부가 유럽 집행위의 지침을 신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⁷⁾

- 유럽 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 C-55/18 사건 판결

영국

총리 사퇴, 임시직 선호 경제(gig economy) 성장, 신규 노조 2개 발족, 블랙리스트 피해 건설 근로자에 대한 보상 등이 본 보고서의 주요 내용이다.

5) Gesamtmetall (2019), "Diese Entscheidung geht in die völlig falsche Richtung", 14 May.

6) Rheinische Post Online (2019), Duisburger Verband übt Kritik: Unternehmer lehnen Stechuhr ab, 21 May.

7) DGB (2019), EuGH schiebt Flatrate-Arbeit einen Riegel vor, 14 May.

브렉시트 문제 장기화로 총리 사퇴

Theresa May 총리가 5월 24일 총리직 사퇴를 발표했다.⁸⁾ 10개 항목으로 구성된 합의안(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민투표 등 다수의 공약 제시)이 내각 및 의회에서 5월 22일 부결되면서 의회 과반수의 찬성표를 확보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⁹⁾ 또 한 차례의 불신임 투표를 놓고 May 총리는 결국 사퇴했다. 현재로서는 후임이 결정되지 않았으나, 노딜 브렉시트를 이끌어내겠다는 브렉시트 강경파인 Boris Johnson의 선출이 유력시되고 있다.¹⁰⁾ 영국산업연맹(CBI)은 신임 총리가 산업계와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할 것을 촉구했으며, 노딜 브렉시트 후 예상되는 심각한 결과에 대해 다시 한 번 경고했다.¹¹⁾

영국 내 임시직 선호경제 호황

영국노동조합회의(TUC) 및 유럽진보재단(FEFS)이 후원하고 2019년 6월 28일 발표된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영국 내 임시직 선호 경제(gig economy) 종사자 수는 지난 3년 간 2배로 증가했다. 이번 연구는 Hertfordshire 대학에서 실시하고 시장조사기관 Ipsos MORI가 현지 조사 및 정보 수집을 담당했으며 대표성을 갖는 2,235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조사에 따르면, 노동연령에 해당하는 성인 10명 중 거의 1명(9.6%)은 최소 주 1회 임시직 선호 경제 플랫폼을 통해 일하고 있다. 해당 비율은 2016년에는 20명 중 1명(4.7%)에 불과했다. 또한, 응답자들은 플랫폼 일자리를 통해 그 외 형태의 소득을 보완한다고 밝혔다. TUC는 이번 연구에 대해 근로자들의 생계 유지가 쉽지 않으며, 상당수가 기존의 일자리 외에도 불규칙하고 불안정한 임시직에 의존해야만 하는 상황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임시직 선호 경제에 종사하는 자들을 위한 임금 인상 및 고용 보호 개선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¹²⁾

- Hertfordshire 대학: Platform Work in the UK 2016-2019

8) DGB (2019), EuGH schiebt Flatrate-Arbeit einen Riegel vor, 14 May.

9) The Guardian (2019), Brexit: May's final effort to win backing falls flat as MPs reject 'new' deal, 22 May.

10) The Telegraph (2019), Next Prime Minister latest odds and polls: Boris Johnson's lead over Jeremy Hunt looks unassailable, 8 July.

11) PoliticsHome (2019), CBI warns Tory leadership hopefuls the UK must avoid a no-deal Brexit, 21 May.

12) TUC (2019), Boom in gig economy workers shows struggle to make ends meet, 28 June.

영어 교육 종사자 및 법조계 종사자 신규 노조 발족

2019년 2/4분기에는 2개의 독립 노조가 발족되었다. 둘 다 비교적 노조활동이 없는 분야로, 전문가뿐만 아니라 해당 부문의 모든 노동자들을 가입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TEFL 노조는 영어 교육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교사, 리셉셔니스트, 관리직 직원, 인턴을 모두 포함한다. 세계산업노동자연맹(IWW) 노조 산하 조직으로 운영되며, 교직원 대다수가 IWW에 가입한 영국의 한 학교에서의 다양한 노력 끝에 설립되었다. 그 결과 임금 인상 등 다수의 성과를 거두었고, IWW는 노조 관련 교육 기획 등 런던 전역의 학교에서 근무하는 그 외 TEFL 근로자들도 지원했다.

법조계 종사자 노조(LSWU)는 법조계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사무 변호사와 법정 변호사를 비롯하여 미화원과 경비원에서부터 법률보조원(paralegal)까지 모두 포함된다. United Voices of the World(UVW)를 통해 설립되었으며, 법무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 확보, 법조계의 임금 및 불평등 문제 해결 등을 목표로 한다.

해당 노조 설립 전에도 영국 독립노동자 노조(Independent Workers Union of Great Britain)를 통해 게임업 종사자, 위탁 돌봄 종사자 등 다양한 독립 노조가 설립된 바 있다.¹³⁾

또한, 범산업적 기구인 Union21은 근로자들이 직장 내 문제를 신고할 수 있도록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했다.¹⁴⁾ WorksForUs를 통해 근로자들은 직장 내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온라인 청원을 올리고 공유할 수 있다. 해당 플랫폼은 미국 기업 CoWorker가 개발한 제품이다.

블랙리스트 피해 건설업 근로자에 대한 거액 보상

건설업계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피해를 입었던 53명의 근로자들이 소송 합의금으로 총 190

13) The Guardian (2016), Foster carers vote to unionise in fight for pay and working rights, 20 September.

14) Unions21 (2019), About WorksForUs.

만 파운드(2019년 7월 26일 기준 210만 유로)의 보상을 받게 될 예정이다. 이번 합의는 2016년 Unite가 제기한 소송 중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로써 대형 건설사들은 블랙리스트에 올라 피해를 입은 1,200명 이상의 노동자들에게 지난 3년간 총 3,500만 파운드(3,920만 유로)를 지급한 것이 된다.¹⁵⁾ 또한, 법적 합의를 통해 해당 건설사들은 Unite가 관리하는 교육펀드에 23만 파운드(25만7,455유로)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소송을 제기한 블랙리스트 피해자들을 돕기로 합의했다. 해당 펀드는 건설업계의 재교육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Unite 센터가 제기한 소송은 3천 명 이상의 건설업 노동자의 개인 및 직원 정보를 저장한 비밀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한 컨설팅 연합(TCA)을 상대로 한 것이었다. 주요 건설사가 이를 후원했으며, 해당 리스트를 활용해 노조 가입자 및 작업장의 보건 및 안전 문제를 제기한 노동자들이 향후 취업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고용을 거부당했으며 그 결과 생계를 잃었다. 해당 블랙리스트는 2009년 영국 정보위원회 (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가 TCA의 사업장을 불시 단속하면서 존재가 알려지게 되었다. TCA 활동에 대한 논란으로 인해, 블랙리스트 작성·사용·판매 또는 공급을 금지하는 '규정 2010(블랙리스트)'이 1999 고용관계법에 신설되었다.

의견

브렉시트로 인해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으며,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재계 및 노동계 모두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부작용을 경고했지만(3월 21일자 CBI/TUC 공동 성명¹⁶⁾ 등) 차기 총리에 도전하는 두 후보자 모두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노딜 시나리오는 EU로부터의 고용권을 위협할 수 있으며, 임시직 선호경제(gig economy)의 확대 및 불안정성을 고려할 때 더욱 중요한 사안이다.

15) Unite the Union (2019), Unite secures historic million pound plus blacklisting legal settlement, 14 May.

16) TUC (2019), TUC and CBI call on Prime Minister to urgently change Brexit approach, 21 March.

오스트리아

본 보고서는 정치적 위기로 인한 정부 붕괴, 임시정부의 의회 결의안, 단체교섭 관련 변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정치적 위기 후 새로운 임시 정부 등장

오스트리아는 2019년 5월 정치적 위기를 겪었다. Heinz-Christian Strache 부총리가 2017년 러시아 신흥재벌의 조카로 추정되는 자와 만나는 영상이 보도되었기 때문이다. 이 영상에서 Strache 부총리는 정치적 후원에 대한 대가로 막대한 공공 사업권을 넘기는 등 부패 행위에 가담하는 것으로 보였다. 자유당(FPÖ) 소속 Strache 총리는 5월 18일 결국 사퇴했다.¹⁷⁾

사건 이후 국민당(ÖVP) 소속의 Sebastian Kurz 총리는 자유당과의 연정을 파기했다. 자유당 소속 Herbert Kickl 내무부 장관이 Strache 부총리(전 자유당 대표)에 대한 조사를 맡게 된다는 이유로, Kurz 총리는 Kickl 내무부 장관 해임을 요청했으나 기각되었다. 그 후, Alexander Van der Bellen 대통령은 총리의 요청에 따라 Kickl 내무부 장관을 해임했고, 나머지 자유당 소속 장관들도 사퇴하는 일이 벌어졌다.

Kurz 총리는 자유당 소속 장관들이 재직했던 부처에 전문가를 배치했고, 국민당은 소수당으로 정국을 운영하다 5월 27일 Kurz 총리와 내각에 대한 불신임안이 의회에서 가결되었다. 투표 후 Van der Bellen 대통령이 내각을 모두 해산하면서 오스트리아 역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¹⁸⁾

6월 3일 대통령은 공무원으로 구성된 임시 기술관료 내각을 구성했다. 남성 6명, 여성 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Brigitte Bierlein 헌법재판소장이 오스트리아 최초의 여자 총리가 되었다.¹⁹⁾ 이번 내각은 9월 29일 재선거시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17) Wiener Zeitung (2019), Strache tritt zurück, 18 May.

18) Der Standard (2019), Kabinett abgesetzt: Österreich sucht neuen Kanzler, 27 May.

19) Der Standard (2019), Kabinett Bierlein angelobt, Van der Bellen bittet Bevölkerung um Vertrauen, 3 June.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법안, 의회 가결

임시 정부가 수립되고 연정 유지에 대한 부담이 사라지자, 의회에서는 다수당이 계속 바뀌면서 다양한 정당 간의 연합이 이루어졌다. 7월 초에는 노동 및 사회정책과 관련한 여러 결의안이 통과되었다.

근무 기간이 40년 이상인 자(최대 12개월의 군 또는 공무 근무, 최대 5년까지의 자녀양육 기간도 포함)에 대한 최소 연금액이 2020년부터 세후 1,200파운드(부부 1,500파운드)로 인상될 예정이며, 주당 최소 65시간의 장기 간병을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한 간병수당이 2020년부터 연 단위로 확정될 예정이다.

또한 2019년 8월 1일부터 육아휴직 기간도 임금 인상 및 기타 근무기간 기준 복지혜택 산정 시 100% 포함될 예정이고, 2019년 9월 1일부터는 남성 근로자들은 1개월의 배우자 출산 휴가(출생 후 8주 내에 사용해야 함)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의용소방대, 자연재해 발생 시 지원 및 구호기관을 돕는 자원 봉사자는 계속해서 임금을 지급받을 법적 권리를 갖게 되며, 회사는 자원봉사자 인당 일 2백 파운드의 지원금을 받는다. 2019년 11월 1일부터는 술집 및 식당 내에서의 흡연이 금지된다(국민당-자유당 연정 정부는 이와 유사한 2015년의 계획을 철회한 바 있다).

이 같은 개혁 조치 실행 비용은 총 11억 유로로 추정된다.²⁰⁾ Hermann Müller 재무부 장관은 2019년 흑자 예산 운영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과도한 지출(특히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에 신중할 것을 의회에 당부했다.

Bierlein 총리는 임명 후 처음 발표한 공식 성명에서 사회적 파트너들과 협의를 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으며, 이에 대해 사회적 파트너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전 정권의 정책 수립 과정에서 자신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노조들이 이를 환영했다.

20) Der Standard (2019), Freies Spiel der Kräfte bringt Mehrkosten von 1,1 Milliarden Euro, 4 July.

- 오스트리아 의회: Freies Spiel der Kräfte: Nationalrat hat mehr als 30 Gesetzesbeschlüsse gefasst
- 오스트리아 의회: Abgeordnete beschließen 1.200 € Mindestpension bei mindestens 40 Arbeitsjahren
- 오스트리아 의회: Nationalrat fixiert Rauchverbot in der Gastronomie ab November 2019

단체교섭 진행 추이

상반기 단체교섭은 34만 명 이상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했으며, 2.7%(공공 공항업)와 3.4%(화학, 전자, 제지업) 사이의 최저임금인상률을 놓고 하반기 단체교섭이 계속 이루어졌다. 2020년까지 모든 부문에서 최저임금 1,500유로를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계획의 일환으로, 의류업에서는 인상률이 3.95%로 결정되었다.²¹⁾

단체교섭 과정에서 노동자들을 위한 다양한 성과가 도출되었다. 특히 2018년 9월 근로시간법 개정을 통해 최대 근무시간이 일 12시간 및 주 60시간으로 연장되었다.²²⁾ 노조는 해당 개혁 조치 이행 이후로 정기 교섭 시마다 그 영향을 축소하는 데 주력하였고, 20개 이상의 단체협약에 장기 근무시간에 대한 '시정 조치'를 포함시켰다.²³⁾ 화학, 전자, 섬유, 제지, 양조, 음료업 등 산별 단체협약에서는 초과근무 3시간 이상, 주당 51시간 이후부터 100%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는 안에 대한 협상이 이루어졌다. 장기 근무시간에 대한 유급휴가도 여러 협약에 명시되었다.

식품업 일부 부문에서는 사용자의 요청에 의해 11~12시간을 근무할 경우, 직장평의회 동의권을 얻어야 한다. 건설 및 건축업, 소매업의 경우에는 단체교섭 과정에서 주4일 근무제에 대한 협상을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약 50만 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보게 된다.²⁴⁾

21) Der Standard (2019), Freies Spiel der Kräfte bringt Mehrkosten von 1,1 Milliarden Euro, 4 July.

22) PRO-GE: Bekleidungsindustrie: KV-Löhne steigen im Schnitt um 3,95 Prozent, 27 June.

23) GPA-djp: Startschuss: KV Frühjahrsrunde ; PRO-GE: Arbeitszeiterfolge in den Kollektivverträgen.

24) ÖGB: 4-Tage-Woche erkämpft, 4 April.

의견

임시정부는 9월 29일 선거까지 운영된다. 선거 며칠 전까지 의회 회기가 예정되어 있어 다양한 결의안들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자, 연금수급자, 자영업자, 농/임업 종사자에 대한 사회보장 보험료 인하 등이 포함된 세제 개편안도 그 중 하나이다. 선거 운동 마지막 단계에서 노동자를 위한 기타 개선안들도 다루어질지 여부는 미정이다.

프랑스

노란 조끼 시위에 대한 개혁, 기업성장과 발전을 위한 행동계획(PACTE)법, 실업급여 개혁, 석면 관련 건강 피해가 우려되는 근로자에 대한 보상 등이 본 보고서의 주요 내용이다.

정부, 6개월간의 개혁 방안 발표

프랑스 정부는 구매력 향상을 위한 조치 이행을 통해 노란 조끼 시위 진압에 성공했으며,²⁵⁾ 개혁 조치를 예정대로 이행하고 있다.

4월 25일 Macron 대통령은 국민 대토론(노란 조끼 시위와 관련하여 진행) 결과 결정된 조치를 발표하고, 일과 고용을 위한 ‘대동원’ 조치를 발표했다. 4월 29일 Philippe 총리는 6개월간의 이행 방안을 제시했는데, 그 내용은 6월 실업급여 개혁(노조의 반대에 부딪힘), 여름 말까지 연금개혁 방안 발표, 가을까지 고령인구 부양 문제 해결을 위한 법 제정 등이다. 5월 2일 정부는 노란 조끼 시위에 대한 해결책으로 도입했던 ‘예외적 비과세 보너스’에 대한 1차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보너스 제도로 약 550만 명의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평균 400유로의 보너스를 지급받았으며 보너스를 지급한 민간 기업은 20%에 해당한다.²⁶⁾

25) Eurofound(2019), France: Latest developments in working life Q1 2019

26) Les Echos(2019), Sous pression, Philippe défend « l'effet massif » des mesures pouvoir d'achat, 2 May.

플랫폼 근로자 채용 강화 및 보호를 위한 법

4월 11일에 제정된 기업성장과 발전을 위한 행동계획법(The PACTE law)은 일자리 창출을 단순화하고 기업의 채용을 독려하기 위해, 고용 관련 제한조치에 새로운 법을 도입한 것이다. 제한 조치 위반으로 사회보험료가 즉시 인상되거나 노동법에 의한 또 다른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기업 및 근로자 모두에게 보다 매력적인 퇴직저축제도를 실행하고, 기업이 사회 및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도록 독려하며, 이사회 내 근로자대표의 수를 늘리는 등 다양한 개혁 조치들도 포함된다.

- 프랑스 정부: PACTE, le plan d'action pour la croissance et la transformation des entreprises
- 프랑스 정부: Loi n° 2019-486 du 22 mai 2019 relative à la croissance et la transformation des entreprises

프랑스 의회는 6월 18일 이동 및 방향성 법(LOM)안을 채택했다. 2020년 1월 1일부터 대체 교통수단 사용을 독려하는 조치가 시행되며, 사용자는 자전거 또는 카풀(운전자 및 승객 모두 해당)로 출퇴근하는 직원들에게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해당 교통비 수당에 대해 직원은 비과세 혜택, 사용자는 사회보험료 미적용 혜택을 받게 되며, 연간 최대 400유로까지 가능하다.

또한, 이번 법안은 배달원 또는 운전원을 채용하는 플랫폼에 대해 더 높은 수준의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각 업무 배정 전 플랫폼 근로자들에게 배송 거리 및 최소 보장 배송비를 안내해주어야 한다. 근로자는 불이익 없이 업무를 거절할 수 있으며, 플랫폼은 근로자가 1개 이상의 업무를 거절했다는 사유로 해당 근로자와의 계약 관계를 해지할 수 없다. 근로자가 스스로 근로 시간 및 휴식 기간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이다.

또한, 플랫폼은 근로자와의 계약관계를 임금근로자로 재설정하지 않고도, 근로조건 및 사회 보장 개선을 위한 현장에 서명할 수 있게 된다.

실업급여 개혁 논란

1/4분기에 사회적 파트너들이 실업급여 개혁 협상 타결에 실패하자, 정부는 1982년 이래 처음으로 자체 개혁안을 내놓았다. 포괄적인 정부 개혁안에는 실업자 지원 강화 및 수당 확보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사용자가 납입하는 실업급여 보험료에 대한 보조금-분담금 제도(bonus-malus) 도입, 단기 계약 체결 건수가 높은 산업 부문(숙박업, 케이터링업, 농식품업 등)에 대한 불이익 부여 등도 해당된다.

이번 개혁안에 따라 실업급여 혜택이 퇴사자 및 자영업자까지 확대되고, 월 총소득 4,500유로 이상의 구직자에 대해 7차월부터 수당이 30% 삭감된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 개혁은 실업자 수 25만 명 감소, 2021년 말까지 34억 유로 절감을 통한 실업급여 제도 적자 축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필리프 총리는 현행 수당 규정이 비정규직 취업을 과도하게 부추길 뿐 '재취업' 유인이 되지 못해 그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일제히 이번 개혁안을 비난했으며, 프랑스 관리직 총동맹(CFE-CGC)은 실업급여의 체감적 특성 상 화이트칼라 및 관리직 근로자가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프랑스 민주노동동맹(CFDT) Laurent Berger 사무총장은 이번 개혁안이 취업과 실업 상태를 반복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매우 불공평'하며 '상당히 냉혹'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프랑스 노동총동맹(CGT) 관리자 Catherine Perret는 '지극히 부당하고 비효과적'이라고 비난했다.

사용자 측에서는 단기 계약에 대한 보조금-분담금이 가장 많은 비판을 받았다. 프랑스 전경련(MEDEF) Geoffroy Roux de Bézieux 회장은 '고용을 저해할 비효과적인 조치'라고 비난했다. 중소기업연합(CPME) François Asselin 회장은 채용 전에 '사용자들이 두 번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석면 관련 건강 피해가 우려되는 자에 대한 보상

4월 5일 프랑스 대법원은 건강을 해칠 수 있는 환경에서 석면에 노출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자는 석면으로 인한 건강 문제가 우려되는 경우 사용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

다고 판결했다. 해당 조치는 사용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일반법 상의 의무에 기반한 것으로, 근로자의 피해 우려 수준은 법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이번 판결은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동시에 법에서 정한 기업에서 근무한 자에 한해서만 보상 자격이 있다는 과거의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의견

노란 조끼 운동은 정부의 개혁노선을 바꾸는데 실패한 것으로 보이며, 이번에 발표된 실업 급여 개혁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향후 연금개혁을 위한 협의는 진행 중이다. 사회적 파트너들이 그러한 협의에 참여는 하고 있으나, 협의 과정에서 정부가 점점 배제시키는 듯한 분위기가 있다는 보도가 있다.

덴마크

이 보고서는 근무환경 개선 노력 강화 및 조율에 대한 정치적 합의, 심리적 근무환경에 대한 신규 법, 스칸디나비아항공(SAS) 조종사 파업 등이 주요 내용이다.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정치적 합의

2019년 4월 의회는 업무 상 질병에 걸리거나 과로에 시달리는 근로자 수를 줄이기 위해, 덴마크 내 근무환경 개선 노력을 강화 및 조율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덴마크 근로환경청(WEA)은 2022년까지 약 4억6,000만 크로네(2019년 7월 23일 기준 6,160만 유로)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²⁷⁾

이번 합의는 근무환경개선 전문가 위원회가 2018년 9월에 발표한 권고안에 따른 것이다. 그

27) Altinget (2019), 460 mio. kr. til Arbejdstilsynet og dobbelt bødestraf: Her er arbejdsmiljøforliget, 25 April.

러나 조기퇴직제도 개선과 관련된 협의가 먼저 진행되면서, 협상에 다소 시간이 걸렸다.

이번 합의는 근무환경 개선과 더불어, 사업장 감독에 대한 WEA의 집중적 노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근무환경이 특히 위험한 기업 및 산업 부문에 대한 감독이 강화됨을 뜻한다. 또한, WEA 감독관의 업무가 현재보다 한층 강화된다.

- 고용부: Aftale om en ny og forbedret arbejdsmiljøindsats og ordnede forhold på arbejdsmarkedet

심리적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신규 법

덴마크 내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정치적 합의의 일환으로, 심리적 근무 환경에 대한 통합법을 제정하기로 정당 간 합의가 이루어졌다. 해당 법의 목적은 사용자, 관리자, 노동자를 위해 규정을 더욱 명확히 하는 것이다. 2019년 가을 중 법안에 대한 정당 간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2020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²⁸⁾

노조는 이번 통합법 제정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이다. 사용자 단체는 관련하여 아무런 입장도 발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덴마크 사용자연맹(DA)의 Pernille Knudsen 부회장은 2019년 1월 신문 논설을 통해, 직장 내 스트레스를 받는 근로자 대다수는 스스로 심리적 및 정신적으로 업무 수행에 문제가 없다고 느끼고 있음을 강조했다. 따라서 스트레스의 원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²⁹⁾

스칸디나비아항공(SAS) 조종사, 임금 및 근무시간 관련 파업

2019년 4월 26일 SAS 소속 노르웨이 및 스웨덴 조종사 약 1,500명은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협상을 놓고 파업에 들어갔다. 주된 요구사항은 임금인상 및 조종사 근무시간 사전 통보에

28) FAO (2019), Aftale skal tage psykisk arbejdsmiljø alvorligt, 25 April.

29) Altinget (2019), DA: Stressede danskere kan sagtens føle sig sunde, 18 January.

대한 것이었다.

SAS가 10년간 재무적 위기를 겪으면서 조종사 및 승무원들은 근무시간이 변경되고 임금이 삭감됐다. 지난 2년간 상황이 반전되면서(10억 크로네 흑자 달성), 조종사들은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조종사들은 신규 단체협약(2019-2022년) 기간인 3년 간 13%의 임금인상, 비행시간 사전 통지 기간 연장을 요구했다. 현행 사전통지 기간은 15일로, 조종사들은 이것이 장기 계획 수립에 불충분하다고 주장했다.

SAS 경영진은 조종사들의 요구사항이 '과도하게 높은' 수준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것이 무책임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비행시간 통지 기한과 관련해서는 현행 제도가 승객 수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5월 2일, 당사자들은 3년 간 10.5% 임금 인상에 합의했다(2019년 4.5%, 2020년 3%, 2021년 4%). 사전통지 기한에 대해 SAS 경영진은 과거에는 40%의 직원에 대해서만 2개월 전 통지를 했으나 향후에는 약 60%에 대해 사전 통지기로 합의했다.³⁰⁾

전망

2019년 6월 15일 덴마크 총선에서는 사회민주당이 사회인민당, 사회자유당, 적색녹색동맹당의 지원에 힘입어 승리를 거뒀다. Mette Frederiksen 사회민주당 대표는 4년 간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게 되었다.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는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한 조기 퇴직에 대한 정치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다(선거 직전, 전 정권에서는 사회민주당의 도움으로 합의 도출에 성공했다).

덴마크 노동조합총연맹(FH)은 조기 퇴직 논의에 매우 활발하게 참여해왔으며, 사회민주당의 신체 및 인지장애자의 정년 차등화 법안 등 관련된 노력을 지지하고 있다.

30) Politiken (2019), SAS-piloter vender tilbage til cockpittet, 2 May.

아일랜드

성별 임금 격차 공시법 시행, 육아휴직제도 개정, 보건업 종사자 파업, 전자 및 건설부문 신규 명령 등이 본 보고서의 주요 내용이다.

성별 임금 격차 공시법 발표

지난 4월, Charlie Flanagan 사법평등부 장관과 David Stanton 국무부 평등·이민·통합 담당 장관은 2019 임금 성차별 방지법안을 발표했다. 이는 임금 투명성 강화를 위한 '2019 파트너십 정부 연차보고서'에 제시된 내용을 이행하는 조치에 해당한다.³¹⁾

해당 법안에 따라 정부는 사용자가 성별 임금 격차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도입할 수 있다. 그러한 규정은 종업원 250명 이상의 사업장부터 먼저 적용되고, 이후 법 운영이 안정화되면 50명 이상의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³²⁾ 사용자는 성별 임금 격차 해소 조치를 실행하는 경우 그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해당 요건은 민간 및 공공 부문에 모두 적용된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사용자는 성별 보너스 및 파트타임 임금뿐 아니라 시급 격차도 공시해야 하며, 성별 임금 격차 비율, 중간값, 평균도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임금 사분위별 남녀 분포를 포함하여 임시직 비율, 직무 분류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야 하며, 성별 임금격차 정보는 매년 공시해야 한다.

Flanagan 장관은 이번 법안을 통해 '성별 임금 격차가 적거나 거의 없는 기업들의 경우 채용 시 유리해져, 기업들이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조치를 최대한 이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31) Government of Ireland (2018), A Programme for a Partnership Government Annual Report 2019, Department of the Taoiseach, Ireland.

32) Eurofound (2018), Ireland: latest working life developments Q2 2018.

아일랜드 노동조합연합(ICTU)은 임금 투명성 강화로 남녀 임금 격차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나 기업 차원의 문제 해결 노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또한, 미이행(부실 또는 미공시 등) 시 처벌방안을 법안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 아일랜드 정부: Gender Pay Gap Information Bill 2019 (Bill 30 of 2019)

이사회 성평등 증진을 위한 신규 이니셔티브

아일랜드 정부는 ‘비즈니스 성장을 위한 균형’ 이니셔티브를 수립하여, 독립적인 연구그룹이 아일랜드 내 기업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여성 임원 수 증대 방안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³³⁾ 해당 그룹은 다양한 목표 및 기업을 위한 제언 등을 함께 제시한 바 있다.

이니셔티브 연구 그룹은 매년 중간목표를 수립하여, 기업들이 구체적인 연간 목표치 대비 달성 현황을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2019년 말까지 Euronext 더블린 거래소에 상장된 모든 기업은 이사회에 1인 이상의 여성 이사를 두어야 한다.

육아휴직기간 연장

지난 5월 사회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이 통과되어, 무급 육아휴직이 현행 18주에서 2020년에는 26주로 늘어난다. 2019 개정 육아휴직법에 따라, 육아휴직은 단계적으로 8주 연장된다.

9월부터는 개정된 법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이 4주 늘어나고, 2020년 9월부터는 4주가 더 추가된다(무급 육아휴직 총 26주). 육아휴직이 가능한 자녀 연령도 확대된다(기존 8세에서 12세).

정부 자체의 유급 육아휴직 규정은 11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기존의 출산 및 육아휴직 규정과 더불어 유급 육아휴직 제도가 추가로 도입된다. 유급휴가는 2주에서 시작해 2021년에는 7주로 늘어날 예정이다.

33) Department of Business, Enterprise and Innovation (2019), Ministers Donohoe and Stanton launch first report of the ‘Balance for Better Business’ Initiative, 29 May.

- 아일랜드 정부: Parental Leave (Amendment) Act 2019 (Act 11 of 2019)

노사관계위원회 연차보고서 발간

노사관계위원회의 2018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고발건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미지급 임금 회수 등 대부분의 업무 분야에서 더욱 활발한 활동이 전개되었다.³⁴⁾ 위원회의 조사 활동으로 작년 한 해 회수된 미지급 임금은 310만 유로에 달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637만 유로의 임금이 회수되었다(조사 15,330건, 고발 359건).

기존의 조정 회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2018년 성공률 87%(2017년: 84%)를 기록하는 등 조정 성공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위원회는 노동쟁의 건수가 낮은 원인을 높은 수준의 조정 성공률로 꼽았다.

판정 성공률은 전반적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항소건 중 48%는 노동법원에서 확정, 27%는 번복, 24%는 변경되었다.

보건업 지원인력 파업

서비스업 전문 및 기술자 노동조합(SIPTU) 소속으로 38개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대 1만 명의 보건업 지원인력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지난 6월 24시간 파업을 실시했다. 예정된 추가 파업이 연기되면서, 노동법원에서 협상이 시작되었으며 6월 말까지 지속되었다.

SIPTU는 직무평가에 따라 권고된 임금인상(최근 직무 변경 및 확장 여부 평가)을 정부가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조합원들이 직무평가에 따라 최대 3,000유로의 임금 인상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관련 보건업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이미 수개월 전에 임금 인상이 이루어졌어야 함을 강조했다.

34) Workplace Relations Commission (2018), Workplace Relations Commission Annual Report 2018, Dublin, Ireland.

이에 앞서 노사관계위원회와의 협의에서 정부는 11월 일부 인상 후 2020년 및 2021년에 차액을 인상하여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건설 및 전기공사업에 대한 산업별 고용관련 명령 조치

2019년 2사분기에 고용담당 장관은 건설 및 전기공사업에 대한 새로운 최저임금을 승인했다. 해당 인상분은 각각 10월, 9월부터 적용된다.

건설 부문의 최저임금은 2019년 10월 1일부터 2.7% 인상되며, 2020년 10월 1일부터 동일 비율로 추가 인상될 예정이다. 해당 인상은 건설 부문 약 5만 명의 기능직 및 직공 근로자에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2015 개정 노사관계법에 따라 산업별 고용관련 명령 제도가 도입된 이후 건설 부문에 적용되는 두 번째 산업별 명령이다. 해당 제도는 ‘등록 고용 협정(registered employment agreements)’에 대해 2013년 대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림에 따라 이를 대체하게 된 것이다.

전기공사업의 최저임금은 2019년 9월 1일 한 차례 인상될 예정이며, 이 또한 산업별 고용관련 명령에 해당한다. 그러나 아일랜드 전국전기사업자협회(NECI)는 현재 고등법원에서 해당 명령에 대한 소송을 진행 중이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NECI는 이번 명령이 전기공사업 경쟁을 저해하며 영세업체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아일랜드 정부: Industrial Relations (Amendment) Act 2015 (Law 27 of 2015)

출처: Country profiles Q2 2019, Eurofound